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공유차량·택시 갈등, 수년간 협의 끝에 법제 마련

산업·경제 일본 최초로 지역기업 응원 프로젝트 시작

사회·복지 고령자·장애인 살기 좋은 주거환경 찾아주기

행재정·교육

‘여성권익 옹호위원회’, 여성 정치참여 지원
‘ICT마을 만들기’로 시민서비스·행정효율 향상

도시교통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에 안전디자인 도입

정보·기타

오픈데이터 생성·관리 전담 ‘ODIS’신설
정부 공공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시애틀	강민규	오사카	권용수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베이징	박성은
베를린	신희완	스톡홀름	문선우	상하이	문혜정
	유진경		허윤희	에드먼턴	장지훈
	홍남명	바르셀로나	진광선	토론토	고한나
뉴욕	윤규근	런던	오도영		김용훈
	이수진	버밍엄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이정근	피렌체	김예름	파리	배세진
	정수지	자카르타	박재현	시드니	정용문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도쿄	박재호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이용원		

공유차량·택시 갈등, 수년간 협의 끝에 법제 마련

공유차량 서비스 양성화 목표...이해관계자 조율에 중점 노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 도시교통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공유차량 모바일앱 서비스의 원활한 법적 양성화를 꾸준히 추진했음.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다년간 3차례에 걸쳐 행정령을 제·개정하였으며,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과 시행착오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최근에야 새로운 법제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배경: 공유차량 서비스 등장과 폭발적 성장

- 고젝(Go-jek), 그랩(Grab) 등 모바일앱 기반 공유차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
 -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고젝은 2018년 2월 기준 공유차량 이용자의 과반수가 선택하는 대표적 공유차량 업체
 - 차량 공유서비스뿐 아니라 음식 배달, 세탁물 의뢰, 차량수리, 포장이사 등 광범위한 원클릭 생활서비스로 진화 중
 - 2017년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고젝의 인도네시아 경제 기여도는 약 9.9조 루피아(8,000억 원)로 집계
 - 싱가포르에서 시작한 그랩도 빠르게 인도네시아에 공유차량 서비스를 제공
 - 2018년 3월 그랩이 우버의 동남아시아 지역 사업을 인수하면서 고젝과 함께 인도네시아 공유차량 시장의 2대 사업자로 성장
- 공유차량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은 교통혼잡 악화와 기존 운수업체와 갈등을 초래
 - 공유차량 서비스가 확대되며 교통혼잡이 악화되는 한편, 법적 지위의 모호함과 서비스상의 불안정한 요소 때문에 기존 택시·버스 회사와 갈등이 발생
 - 2016년 3월 자카르타 도심에서 만여 명의 택시기사와 버스기사가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규제 마련 필요성이 제기
-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회사 블루버드(Blue Bird)는 일찌감치 고젝과 상생을 시도
 - 블루버드는 이미 2011년에 자체 앱을 개발한 상태였지만, 고젝과 파트너십을 맺고 고젝 모바일앱 내에 블루버드 택시 호출 버튼을 제공
 - 또한, 고젝에서 일반 차량 호출 시에도 랜덤으로 블루버드 택시가 호출되게 설정

주요 내용: 이해관계자 조율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

- 기존 법제는 공유차량 운영을 적절하게 규제·관리할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하지 못함
 - 관련법상 공유차량 서비스로 운행되는 차량은 택시와 같은 공식적 비노선형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주되지 않음
 - 서비스업체도 관련 영업허가가 없기 때문에 교통부가 아닌 정보통신부가 관할
- 택시·버스기사의 거센 시위에 대응방안 마련 시작
 - 자카르타 주정부는 우선 공유차량 운전자의 주행안전성시험(KIR)을 시행하고, 투자조정청 허가과 납세고유번호 등록을 마친 업체의 설립을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
 - 보고르시는 2017년 3월 이해관계자가 한데 모여 충돌 방지에 합의
 - 공공시설에서 공유차량의 하차는 가능하나 차량 대기 및 승차는 금지
 -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공항·기차역·병원 등 주요 공공시설에서의 공유차량 대기·승차를 금지하는 정책을 운영 중(승객 하차는 가능)
- 교통부의 2차례에 걸친 행정령 개정이 이해관계자 조정 실패로 무효 판결
 - 2017년 공유차량 서비스를 양성화하고 기존 운수회사와 공유차량 업체가 '평평한 경기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을 목적으로 행정령 개정 시도
 - 하지만 이 개정안은 공유차량 운전자의 거센 반대와 시위를 불러일으켰으며, 영세·중소업체법과 상충 우려를 이유로 2017년 10월 대법원 무효 판결
 -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거쳐 기존 조항을 보완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4월 시행을 발표
 - 공유차량 운전자 면허 소지와 서비스업체의 운수회사 지위 획득 등을 의무화했지만, 서비스업체는 차량 미소유를 이유로 운수회사가 아니라는 입장
 -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2018년 9월 개정안이 공유차량을 운행하는 온라인 택시 운전자에게 불합리함을 이유로 다시 무효 판결
- 무효화된 2개의 행정령을 대체하는 특별임대교통의 운행에 관한 행정령을 제정해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
 - 온라인 택시의 서비스 기준, 운행지역 설정, 수요 계획, 특별임대교통의 상업화, 요금, 기술기반 앱 이용 등에 관한 49개 조항을 신설
 - 현재의 행정령은 행정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가능하며, 업체·운전자·승객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했다는 평가

[표 1] 인도네시아 공유차량 서비스 관련법 제·개정 내역

구분	주요 내용	결과
1차 행정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최대 운임 설정으로 저가운행 경쟁방지 - 공유차량에 특별임대차량 표시 스티커 부착, 차량 내에 운행지역과 운전자·업체 정보 등 표시 -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의 도시별 차량 쿼터 설정 -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와 운전자 간의 계약 시 대중교통 운행허가증을 소지한 업체(조합)와 협력이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차량 운전자의 강한 반발 - 영세·중소업체법과 상충 우려를 이유로 대법원 무효 판결
2차 행정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열어 기존 개정안 보완 - 공유차량 운전자의 관련면허 소지, 스티커 부착, 차량주행 안전성 시험 통과 등의 의무화 - 공유차량 서비스업체는 정식 운수회사 지위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차량 서비스업체는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음을 이유로 운수회사 등록을 거부 - 공유차량 운전자의 불합리함을 이유로 대법원 무효 판결
특별 행정령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지역을 도시 내, 공항·항구 및 기타 교통결절점 간 이동으로 한정 - 호출과 요금 결정은 ICT기술 기반의 앱으로만 실행 - 공유차량 서비스업체는 정부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함 - 정부가 설정한 요금 범위 안에서 운임을 설정 (1km당 3,500루피아(280원)~6,000루피아(480원)) - 최저 서비스 기준 위반 시 4단계에 걸쳐 운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중 - 행정당국의 적절한 개입(감시·보호·통제 등)을 가능하게 함

향후 과제

- 아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의 온라인 택시 영업
 - 온라인 이륜차 택시는 공식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온라인 이륜차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양성화를 요청한 제소를 기각
 - 교통부는 온라인 이륜차 택시의 헬멧 사용 의무와 운전규칙 준수를 강조하는 한편, 올해 안에 안전·요금·운행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령을 제정할 계획
- 운전 중 스마트폰 기반 GPS의 사용 금지 규제가 공유차량의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
 - 일부 공유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스마트폰 GPS의 예외적 사용 허가를 위해 도로교통법의 안전운전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올 2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 교통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운전 중 스마트폰 기반 GPS 사용 시 최대 3개월 징역이나 75만 루피아(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을 강조
 - 운전 중 스마트폰 GPS 사용금지가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유차량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여 귀추가 주목됨

도로교통법 2009년 22호

비노선형 일반 대중교통 차량의 관리에 관한 교통부 행정령 2016년 32호

비노선형 일반 대중교통 차량의 관리에 관한 교통부 행정령 2017년 26호

비노선형 일반 대중교통 차량의 운행에 관한 교통부 행정령 2017년 108호

특별임대교통의 운행에 관한 행정령 2018년 118호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7/10/20/per-1-november-2017-taksi-online-wajib-pakai-stiker-angkutan-sewa-khusus>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7/03/30/blue-bird-dan-go-jek-bekerjasama-hadirkan-go-bluebird>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7/04/05/commentary-regulating-ride-hailing-business-regulating-the-future.html>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7/10/28/akhirnya-kemnterian-perhubungan-menerbitkan-payung-hukum-untuk-taksi-online>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7/11/06/menhub-apresiasi-uji-kir-khusus-taksi-online-dki>

<https://www.thejakartapost.com/academia/2017/07/06/editorial-a-level-playing-field-for-taxis.html>

<https://www.thejakartapost.com/life/2018/02/20/indonesias-most-popular-ride-hailing-app-survey.html>

<https://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c2dbe40062fa/mengintip-isi-aturan-baru-taksi-online>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일본 최초로 지역기업 응원 프로젝트 시작

일본 교토市 / 산업·경제

일본 교토市는 일본 최초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과 함께 계승·발전할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지역기업 원년’ 대책으로 ‘교토시 지역기업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기업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임.

배경과 개요

- 시대변화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을 도와 상생을 도모할 목적
 - 지역기업은 인구감소, 지역 커뮤니티 약화, 경쟁 심화 등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규모가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할 필요 인식
 - 대기업·중소기업처럼 기업의 규모가 아닌 지역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기업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성을 인지
- ‘교토·지역기업 선언’(京都・地域企業宣言)으로 지역기업의 정의와 목표를 명문화
 - 2018년 9월 발표하였고, 지역기업의 특성과 추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상정
 - 1) 자조 노력과 기업 간 연계·융합으로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
 - 2) 생활문화 계승, 지역사회의 안정성,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이바지
 - 3) 일의 보람을 추구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젊은 층을 비롯한 다양한 주역의 활약을 지원
 - 4) 계승해 온 문화·지혜·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가치 창조에 도전
 - 5) 숲과 물의 혜택을 살리고 생활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
- 2019년을 ‘지역기업 원년’(地域企業元年)으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시행
 - ‘교토시 지역기업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조례’(京都市地域企業の持続的発展に関する条例)를 제정해 지원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설정
 - ‘지역기업 응원 프로젝트’(地域企業応援プロジェクト)를 시작해 아이디어 실현, 기업의 회복력 구축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

주요 내용 1: 지역기업 발전 조례

- 기업의 규모가 아닌 지역과 관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
 - 교토·지역기업 선언의 의미를 살리고 지역기업의 활동과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2019년 중에 시행될 예정
 - 지역기업의 정의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교토 시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지역에 터를 잡고 활동하는 사업자
- 지역기업, 시정부, 시민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
 - 지역기업은 조례와 선언에 제시된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 사업 활동으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며, 계승해 온 지역의 문화·지혜·기술을 배우는 한편, 새로운 가치 창조 등에 힘쓸 것
 - 시정부는 지역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
 - 정책을 검토할 때 지역기업의 의견을 듣고, 지역기업의 실태 파악에 힘쓰
 - 지역기업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 등 필요한 조치 실행
 - 시민은 지역기업을 이해하고, 지역기업의 지속적 발전에 적극 협조

주요 내용 2: 지역기업 응원 프로젝트

- 지역기업 미래력 창출 코디네이터 사업
 - 전문 코디네이터 조언, 상담회 개최, 기업 간 매칭 등, 신사업창출 지원 등의 정책으로 지역기업의 사업 아이디어 실현을 돕는 사업
 - 월 1~2회 사업 아이디어 실현 상담회 개최, 교류회 개최로 지역기업 간의 매칭 지원, 목표 설정과 진행 상황 확인 등을 돕는 코디네이터의 개별 지원 등
- 지역기업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는 기업을 표창
 - 지역기업 선언의 취지를 잘 살린 사업이나 활동을 한 중소기업을 표창하고, 시의 홍보매체를 활용해 널리 알림
- 지역기업 회복력 구축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위기대응 능력 강화
 - 기업의 평상시 예방력, 위기발생 시 대응력, 위기 이후의 재생력 등을 향상
 - 재해 시 사업계속계획(BCP) 수립과 기업의 방재활동을 지원

<http://www.city.kyoto.lg.jp/sankan/cmsfiles/contents/0000246/246159/300910.pdf>

<http://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46159.html>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고령자·장애인 살기 좋은 주거환경 찾아주기

프랑스 보르도市 / 사회·복지

프랑스 보르도市는 고령자 및 거동이 제한된 장애인 등 주거약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요구자의 필요와 조건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고령자 주거지원

-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이며, 대상자의 소득수준과 필요에 맞는 지원 제공
 - 삶의 질 개선, 주거환경 개선, 경제적 지원, 맞춤형 주거환경 찾아주기 등 크게 4가지 영역을 지원
- 삶의 질 개선 지원: 방문간호사, 음식나눔, 자원봉사자 말동무 등
 - 일상생활보조사를 지원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안내
 -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필요시 방문간호사 지원
 -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정기적·주기적·간헐적 방문으로 구분
 -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조사 후 식사 배달
 - 주 5일 총 7끼씩 배달하며, 금액은 희망자의 수입에 따라 책정
 - 영양사가 만든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단으로 보르도市 공립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보르도 중앙급식소에서 조리
 - 청년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하여 말동무를 해주는 서비스
 -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해 고독 문제 등을 미연에 해소
-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고령자 거동 불편을 줄이는 개선공사 비용을 지원
 - 고령자가 현재의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주거환경이 고령자의 거동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시청과 관련기관이 협력해 개선공사 비용을 지원
 - 미끄럼방지 바닥 설치, 욕조의 샤워부스 교체, 안전 손잡이의 설치 등
- 새로운 주거지를 원하는 고령자에게 맞춤형 주거환경 찾아주기
 - 고령자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각종 안전장치까지 갖춘 노인자립형 주택 소개
 -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투룸 형태에 각종 주방설비와 기본 가구가 포함된 주택

- 비용은 월 462~552유로(60만~72만 원)이며, 60세 이상이 대상
-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비스 직원이 근무하며, 주 7일 24시간 원거리 어시스트 서비스 제공
- 한 끼에 2.3~5.15유로(3,000~6,700원) 수준의 저렴한 구내식당이 구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취미활동을 제공
- 노환·병환 등으로 자립 생활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실버타운을 추천
 - 보르도에는 사회활동 중앙기금(CCAS: Caisse Centrale d'Activités Sociales)이 운영하는 실버타운 2곳 외에도 사립 실버타운 24곳이 시내 곳곳에 있음
 - 이와 같은 기관은 고령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 낮에만 기관에서 생활하고 저녁에는 귀가하는 주간반을 운영
- 이외에도 젊은 층과 함께 셰어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세대통합주택이나 호스트 가정과 연계를 지원

장애인 주거지원

- 고령자 주거지원과 기본적 내용은 비슷하고, 지원 담당기관이 다름
 - 장애인이 본인의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환경이 적합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도립 장애인지원 센터’에서 관련 전문가를 소개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무장애(Barrier-free) 주택 찾아주기
 - 장애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사무소에서 직접 자신에게 적합한 무장애 주택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
 - 주택을 찾는 장애인이 ‘무장애주택 연구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에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대기자 목록에 올리고 적합한 주택을 찾아 소개
 - 신축 공공주택은 관계법에 따라 거의 무장애 주택으로 설계
- 혼자 거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용 시설을 찾도록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독자적인 자립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의료시설이 갖춰진 숙박시설이나 기숙사 형식의 시설을 추천
 - 또는 호스트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계(지롱드(Gironde)도에서 지원)
-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보조금 등 지원
 - ‘도립 장애인지원센터’는 자택 거주를 희망하지만, 주거환경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관련 전문가를 연계
 - 다양한 형태의 주택 보조금 지원

- 각자의 주거형태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일반 민간 주택 세입자에게는 국립주거개선사무소가 공사비 확보 지원
 - 공공주택 세입자는 공공임대인이 의무적으로 환경개선 공사를 시행
 - 집주인에게도 시청과 관계부처에서 미끄럼방지 바닥재, 욕조의 샤워부스 교체, 안전바 설치 등의 공사비를 최대 4천 유로(520만 원) 지원
- 가정방문 서비스 등으로 삶의 질 개선 지원
 - 다양한 기관·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가정방문 도우미와 같은 인적 보조나 크고 작은 집안 수리 등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

신축 일반 주거건축물 무장애 설계 의무화

- 신축 일반 주거건축물 대부분은 무장애 설계가 의무화
 - 건축법은 신축 일반 주거건축물에서 엘리베이터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가구는 100%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무장애 주택으로 설계할 것을 규정
 - 주차장의 전체 대수 중 5%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건물 입구까지의 보행로에는 일체의 단차나 5% 이상의 경사(10m 거리에 50cm 높이차)를 둘 수 없도록 규정
 - 25cm 이상의 단차에는 반드시 난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접근이 가능한 높이에 전용 우체통을 설치
 - 공동주거 형태의 건물에는 복도·통로의 폭과 현관문 개폐 공간 등에 여유를 충분히 두도록 규정(통로 폭 120cm, 현관문 앞 가용공간 120×220cm)
 - 주택 내 기본 생활공간의 무장애 설계를 의무화
 - 주방, 욕실, 화장실, 침실 1개씩은 반드시 무장애 설계를 하거나, 간단한 공사(칸막이 제거 등)로 무장애화가 가능하도록 설계
- 무장애 주택이 비장애인에겐 오히려 불편할 수 있음을 고려해 적용 비율을 조정
 - 무장애 설계 주택은 화장실·욕실 등이 필요 이상으로 넓고 다른 방은 좁아 비장애인에겐 오히려 불편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새로 개정된 법에는 신축 주거건물 설계 시 전체 가구 수의 5%만 무장애 주택으로 설계하도록 규정

<http://www.autonomieseniors-bordeaux.fr/>

<http://www.bordeaux.fr/>

http://www.le-gout-dans-nos-assiettes.com/index.php?option=com_repas&view=criteres&Itemid=23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여성권의 옹호위원회’, 여성 정치참여 지원

캐나다 에드먼턴시 / 행정·교육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일찌기 지난 2012년부터 여성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포럼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이를 계승한 ‘여성권의 옹호위원회’(WAVE: Women’s Advocacy Voice of Edmonton)를 운영해 시의 각종 여성 관련 정책에 조언을 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리더십을 향상해 사회적·정치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여성 삶의 질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

배경과 개요

- 여성의 문제와 정치참여·리더십 등을 논의하는 포럼이 소위원회로 발전
 - 2012년 전임 시장의 주도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리더십 강화 등의 여성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포럼이 진행
 - 다양한 계층에서 모인 700여 명의 여성이 참여
 - 현 시장과 시의회는 여성문제 관련 전임 시장의 정책 비전을 승계하였고, 2014년 논의 끝에 여성권익을 옹호하는 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승인
 - 여성권의 옹호위원회(이하 ‘WAVE’)는 15명의 지역사회 봉사자로 구성
 - 위원들은 각자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살려 시의 관련 업무에 자문을 제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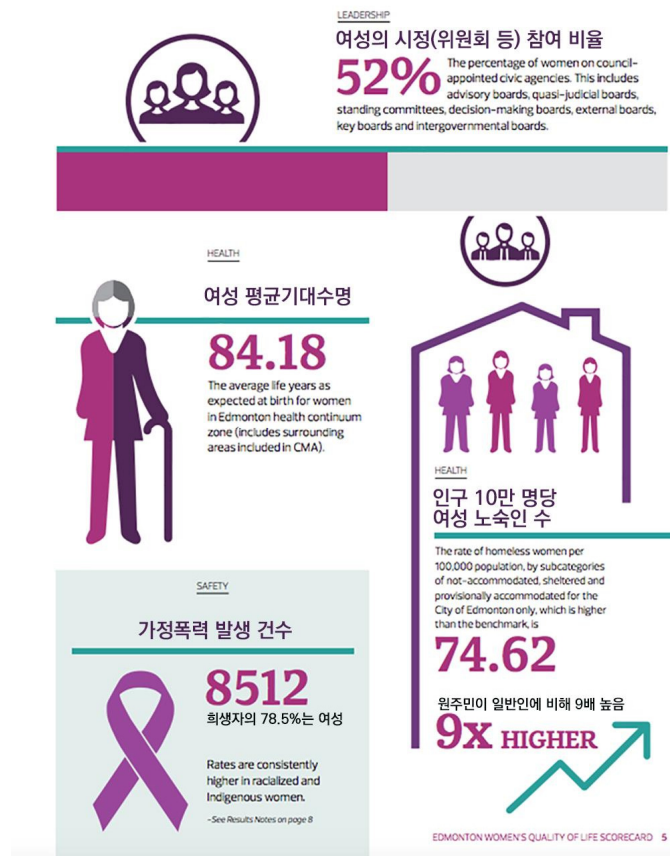
- WAVE의 주요한 세 가지 목표는 참여, 리더십, 모범사례 수집
 - 참여: 연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여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여성 모임 활성화와 참여 기회 제공에 집중
 - 리더십: 여성 리더십 향상으로 사회·정치의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강화
 - 멘토십 프로그램 제공으로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해 여성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정치적인 참여를 적극 할 수 있도록 북돋우며, 동등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
 - 모범사례 수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조사해 에드먼턴시 여성정책의 문제점과 가능성 등을 확인
 - 여성 인구통계 조사와 심리 프로파일링 등의 현황 조사를 진행

○ 2018~2019년도 주요 목표

- 성별에 관한 교차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와 연관되어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검토·평가·권고
- 다양한 리더십 함양 기회를 제공해 여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와 파트너십을 강화
- 웹사이트·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며, 성소수자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
- 시의회에 여성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시의원 10%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심포지엄 개최와 투표 참여 독려 등을 추진
- 에드먼턴 여성의 삶의 질과 평등 지수 등을 나타내는 스코어카드를 정기적으로 제작해 여성이슈 관련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홍보
-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인근도시와 협력하고 고용·인사·교육 시스템 역량도 증대

주요 활동

-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리더십 소위원회’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
 - 여성 위원을 늘리기 위해 선거전략을 연구·수립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
- 에드먼턴 여성 삶의 질 스코어카드(Edmonton Women’s Quality Of Life Scorecard)
 - 여성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를 분석·정리하여 스코어카드로 발행
 - 재정과 경제, 리더십, 정치적 권한 및 교육, 건강, 안전 부문의 현황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에드먼턴 여성은 캐나다 전체 여성보다 5개 부문 중 3개 부문(경제, 교육, 건강)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정규직에서 임시직으로 고용 변화가 1%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
- ‘잠재력을 열어라 2016~2017’ 프로그램
 - 정치에 관심 있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정부의 여성 정치인 부족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
 - 16세 이상의 여성이나 성소수자 여성 중 정치참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대상
 - 매월 1회 저녁시간에 진행되며, 지난 3년간 시범프로그램으로 운영
 - 현재 50여 명의 참가자와 멘토가 총 8개의 그룹 세션을 진행 중
 - 다양성·포용성·대표성, 정책과 거버넌스, 선출직 공무원의 삶, 공적 참여와 공동체의 구성, 미디어, 일과 삶의 균형, 캠페인 101, 시의회 의원과 연계



[그림 1] 에드먼턴 여성 삶의 질 스코어카드

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initiatives_innovation/womens-initiatives.aspx#accordion-C76C02FF00164D2BA7212719C0BB6AE6

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documents/PDF/WomensInvolvementMunicipalElection.pdf

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documents/PDF/OTP_ProgramGuide.pdf

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documents/PDF/WAVE-StrategicPlan.pdf

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documents/PDF/WAVEQualityofLifeScorecard.pdf

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documents/PDF/WAVEAnnualReport2016-2017.pdf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ICT마을 만들기’로 시민서비스·행정효율 향상

일본 이토시마市 / 행재정·교육

일본 이토시마市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지역과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행정에 요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최신 ICT를 적극 활용한 시민 서비스 향상, 마을 만들기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는 ‘ICT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배경

- 정보화 사업을 완수했지만, ICT 환경 변화로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
 - 시정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시민서비스 향상과 인터넷환경 정비 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의 시스템화 등을 추구하는 ‘행정정보화’를 추진해 일정 성과를 거둠
 - 공공시설·편의점에서 증명서 교부, 전자신청 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구축, 디지털격차 해소, 행정사무 효율화, 정보보안 대책 등 대부분 목표를 달성
 - 그러나 오늘날 ICT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행정이 지역정보화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이나 행정에 요구되는 수요가 크게 변화
 - 이전에는 업무 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신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과제 해결이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목적
- 시민서비스 향상, 마을 만들기 활성화 등을 목표로 새로운 정보화 사업 시작
 - 시정부는 2019년 1월 16일 ‘ICT마을 만들기 추진 계획’(ICTまちづくり推進計画)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시의 정보화를 추진하기로 결정
 -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최신 ICT를 적극 활용한 시민서비스 향상과 마을 만들기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함

ICT마을 만들기 추진 계획

- ICT를 활용한 풍요로운 시민생활과 질 높은 행정의 실현이 기본 이념
 -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3가지 기본 방침을 설정하고 구체적 정책·사업을 제시
 - 3가지 기본 방침은 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민 서비스 향상·확충, ② ICT를 적극 활용한 마을 만들기 활성화, ③ 업무개선과 정보 보안 강화

- 계획 기간은 2018~2020년의 3년간으로 함
- 시의 장기종합계약이나 각종 계획과 정합성, ICT 발전에 따른 사회정세 변화나 정부·현의 ICT 정책 상황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표 1] 2020년까지 추진할 정책과 사업

기본 방침	정책	사업
시민 서비스 향상·확충	창구 서비스 기능 향상	① '편리한 창구'(やさしい窓口) 정비 ②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 도입
	ICT를 활용한 교육 충실	③ ICT 교육 추진
마을 만들기 활성화	민관 데이터 연계 추진	④ 행정 정보 오픈 데이터화
업무개선과 정보보안 강화	업무 효율화와 인재 육성	⑤ 페이퍼리스(paperless)화 추진 ⑥ AI·RPA 활용 ^{주)} ⑦ ICT 활용을 위한 인재 육성
	정보보안 강화	⑧ 정보보안 감사 실행과 정보보안 정책 재검토 ⑨ ICT-BCP 재검토

주: ⑥은 다른 지자체의 RPA 도입 실증실험 결과 업무시간이 70%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을 참고해, 인공 지능(AI)이나 RPA를 활용해 정형업무를 자동화하고 업무 효율을 향상함으로써 경비절감과 인적자원 최적화를 꾀하는 사업임. 2020년까지 1개의 업무에 AI를, 5개의 업무에 RPA를 도입할 계획

[표 2] 2021년 이후 시행을 전제로 2020년까지 검토할 정책과 사업

기본 방침	정책	사업
시민 서비스 향상·확충	LoRaWAN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① LoRaWAN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시스템 개발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한 편리성 향상	② 마이 넘버 카드 기능 추가
	광 인터넷 정비	③ 광 인터넷 환경 정비 촉진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	④ 특정 공간 지역 방재 시스템 활용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재·관광 등의 기반 정비	⑤ 공중 무선 LAN 정비
업무개선과 정보보안 강화	일하는 방법 개혁과 ICT 활용	⑥ 텔레워크 조사 연구 ⑦ 교무지원 시스템 도입과 교육 정보 보안 향상

<http://www.city.itoshima.lg.jp/s007/010/080/010/20190116155736.html>

http://www.city.itoshima.lg.jp/s007/010/080/010/ICT_PropulsionPlan.pdf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에 안전디자인 도입

영국 런던시 / 도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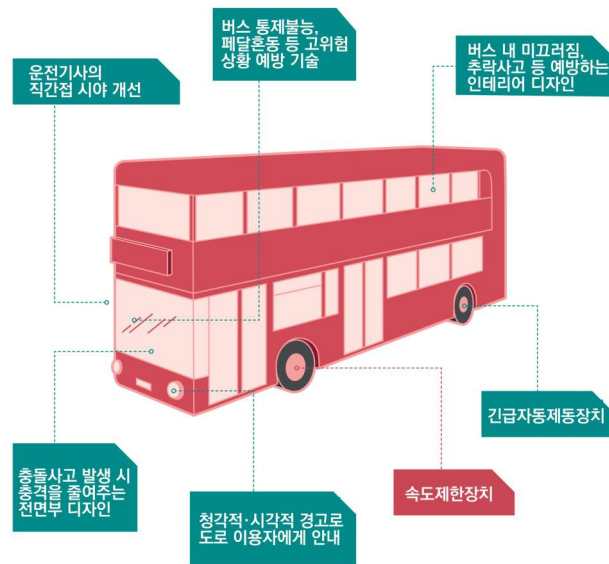
영국 런던시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비전 제로(Vision Zero) 프로그램의 하나로, 보행자·자전거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버스과 대형차량의 안전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디자인을 도입하였으며,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배경

-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대형차량의 안전기준 강화 필요 제기
 - 런던시는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비전 제로 프로그램을 시행 중
 -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가운데 대형차량(버스와 대형트럭 등)이 일으키는 교통사고와 사망사고의 비율이 높아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 인식

버스 안전 강화

- 영국을 상징하는 대중교통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개선
 - 2층으로 된 붉은 색의 런던버스는 영국을 상징하는 대중교통인 동시에 런던의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차량이기도 함
 - 2014~2016년 버스 충돌사고로 36명의 사망자와 480명의 중상자가 발생
 - 2017년 한 해에만 버스 이용 시민이 겪은 차량 내 넘어짐 사고는 총 3,074건
 - 이에 따라, 런던교통공사와 런던버스 운영업체가 런던버스의 안전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
 - 비전 제로 정책의 하나로 진행되며, 버스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하고 ‘안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
- 버스 안전디자인: 2018년 말 이후 제조되는 모든 버스에 7가지 안전기술을 적용
 - 버스 운전기사의 직접시야(전면 유리창 등)와 간접시야(후방 카메라 등) 개선
 - 버스의 통제불능 상태나 운전자의 페달 혼동 등 고위험 상황을 예방하는 기술
 - 버스 내 미끄러짐, 추락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 충돌사고 발생 시 충격을 줄이는 전면부 디자인
 - 청각적·시각적 인지성을 높여 버스 주변의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경고
 - 속도제한 장치와 긴급자동제동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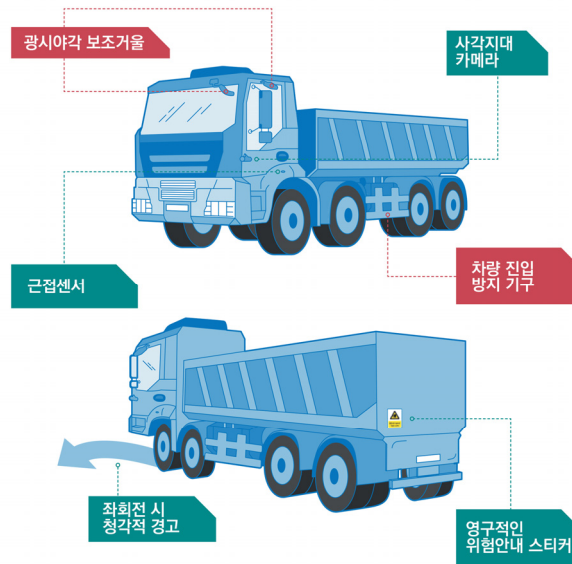
[그림 1] 버스 안전디자인 적용 내용

- 사고 데이터 분석과 운전자 교육 등 제공하는 버스 안전 프로그램 도입
 - 2016년부터 3,300만 파운드(479억 원)의 예산을 투입
 - 2022년까지 2005~2009년 대비 버스 관련 사고 70% 감소 목표
 - 2030년까지 버스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0%를 지향
 - 사고 데이터 분석, 안전 모니터링, 운전자 교육, 펀드 조성 등 실행
 - 버스사고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사고 유형과 경향을 파악하며, 버스회사 내부의 사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 내용을 대중에게 알림
 - 버스안전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관리
 - 운전기사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조사·관리

대형트럭 안전 강화

- 대형트럭도 런던의 보행자·자전거에 큰 위협
 - 2016년 한 해 동안 자전거와 차량 간의 충돌사고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50%는 대형트럭과 연관이 있으며, 보행자 충돌 사망사고의 23%에도 대형트럭이 관여
 - 2013~2016년 대형트럭이 일으킨 사고로 221명이 사망 또는 중상
 - 도심 운행과 맞지 않는 대형트럭 디자인을 개선할 필요
 - 대형트럭은 기본적으로 비포장도로나 고르지 않은 지면에서 잘 운행될 수 있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트럭이 도시 내에서 운행

- 더 안전한 대형트럭을 만드는 안전디자인 개발·적용
 - 넓은 시야의 보조거울 설치
 - 근접센서, 후방카메라 설치로 사각지대 보완
 - 트럭 하부에 차량 진입 방지 기구 설치
 - 좌회전 시 경고음 발생 장치 부착으로 청각적 안내
 - 트럭 후방에 훼손되지 않는 위험안내 스티커 부착



[그림 2] 대형트럭 안전디자인 적용 내용

- 대형트럭 운전자의 시야확보 수준을 별점으로 평가해 별 3개 이상 확보 의무화
 - 대형트럭의 시야확보 수준이 별 1개 이하일 때는 법적 제재
 - 별점 0점 트럭은 후방카메라·근접센서 설치를 의무적으로 이행
 - 2024년부터 운전자 시야확보 수준이 별 3개 미만인 대형트럭은 런던 시내 운행을 금지

<https://tfl.gov.uk/corporate/safety-and-security/road-safety/bus-safety>

<https://tfl.gov.uk/info-for/deliveries-in-london/delivering-safely/direct-vision-in-heavy-goods-vehicles>

<https://www.london.gov.uk/what-we-do/transport/improving-londons-roads/vision-zero-london>

오픈데이터 생성·관리 전담 ‘ODIS’ 신설

독일 베를린시 / 정보·기타

독일 베를린시의 경제, 에너지, 기업 상원부는 2018년 5월 베를린시의 오픈데이터 생성과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베를린 기술재단(Technologische Stiftung Berlin)에 오픈데이터 정보처인 ‘ODIS’(Open Data Informationsstelle)를 설립함

배경

- 오픈데이터의 효용성에 주목한 베를린시, 데이터 공개 전략 추진에 집중
 - 오픈데이터는 도시를 더 잘 이해하고, 정책을 투명하게 만들며, 시민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이바지함은 물론,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음에 주목
 - 시정부는 2016년에 전자정부(E-Government)법을 발효하며 데이터 공개를 추진
 - 연방정부 차원의 데이터 공개 관련법은 2017년 7월에 통과되었으며, 2019년 1월 9일 오픈데이터의 조정과 지원을 맡는 중앙사무실이 마련
 - 베를린 기술재단 대표 니콜라스 짐머(Nicholas Zimmer)는 새로운 오픈데이터 전략이 베를린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
 - 그동안 베를린은 행정구조가 복잡하고 데이터 공개의 분명한 기준이 없어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이 어려웠고, 행정의 디지털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
 - 새로운 오픈데이터 전략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생성하고, 더 빠른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2030년까지 베를린에 3천만 유로(39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줄 것
- 시정부의 오픈데이터 생성·관리를 전담하는 오픈데이터 정보처 ‘ODIS’ 신설
 - 시 경제·에너지·기업 상원부에서 2018년 5월 베를린 기술재단 내에 설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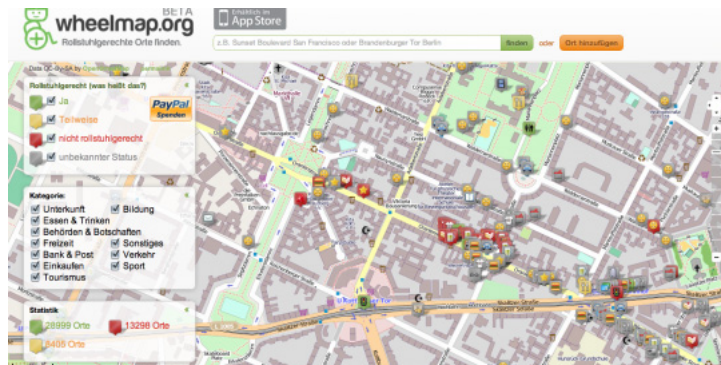
- ODIS는 시의 상원 행정부와 자치구의 직원 인터뷰를 토대로 기획
 - 베를린 기술재단이 기획 인터뷰를 실행한 결과,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파악
 - 1) 데이터 공개·관리에 관한 명확한 책임 규정
 - 2) 정교하게 전략이 짜여진 프로토콜 정립
 - 3) 데이터 공개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지원

-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ODIS의 방향성을 크게 4가지로 정리
 - 1) 정부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인벤토리 작성
 - 2) 데이터 공개 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 3) 오픈데이터 베이스의 품질과 내용 감독 강화
 - 4) 자동화 프로세스를 활용한 오픈데이터 작업의 업그레이드
- ODIS의 활동 내용 1: 각 행정부서의 오픈데이터 처리 관련 질문에 답변 제공
 - 행정부서의 오픈데이터 관련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음
 - 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가? 오픈데이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공개될 수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가? 공개된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 시민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데이터는 무엇인가? 시민들이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는 무엇이 있는가?
 -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적용 가능한 응용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오픈데이터가 현재 업무환경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
- ODIS의 활동 내용 2: 오픈데이터를 생성·처리하는 단계별 과정에 함께 참여
 - 1단계: 개방할 데이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
 - 2단계: 행정부처별로 가치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선별
 - 3단계: 데이터 공개 시 발생할 기술적, 법률적 문제를 지원하여 발행 계획 설정
 - 4단계: 데이터의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에 적용 방법을 제공

베를린의 오픈데이터 현황

- 현재까지 22개 카테고리 내 1,716개의 오픈데이터 베이스를 공개
 - 카테고리: 노동시장, 교육, 인구, 지리 및 도시계획, 건강, 유아 및 청소년 예술과 문화, 행정, 예산 및 세금, 의정서와 결의안, 기타, 사회복지, 스포츠 및 여가, 관광, 환경과 기후, 공급 및 폐기, 소비자 보호, 교통, 선거, 경제, 주택 및 부동산
- 현재까지 총 59개의 오픈데이터 기반 응용 사례(프로젝트, 웹사이트, 스마트폰앱 등)
 - 휠맵(Wheelmap):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적용 공공장소를 신호등 색으로 표시
 - 녹색은 접근 쉬움, 황색은 장애인 화장실 등의 일부 시설 부족, 적색은 접근 불가능한 장소를 의미
 - 장애인 관련문제의 인식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공공장소를 무장애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

- 건물 배기량 측정기(LoCal): 건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시각화한 지리정보 프로그램
 - 독일 지리연구센터가 개발하였으며, 건물 공간계획과 배기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3D 도시 모델에 시각화하여 도시 내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제어
- 이외에도 시정부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새로운 오픈데이터 정보를 업로드하고 문의·피드백을 받음



[그림 1]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를 표기한 온라인 지도 휠맵

<https://daten.berlin.de/>

<http://odis-berlin.de/>

<https://www.berlin.de/sen/web/presse/pressemitteilungen/2018/pressemitteilung.699733.php>

<https://www.berlin.de/sen/web/presse/pressemitteilungen/2018/pressemitteilung.701787.php>

<https://www.berlin.de/sen/web/presse/pressemitteilungen/2018/pressemitteilung.747895.php>

https://www.technologiestiftung-berlin.de/fileadmin/user_upload/Open_Data_in-der-Verwaltung_WEB.pdf

<https://digitalpresent.tagesspiegel.de/berlin-oefnne-dich>

<https://wheelmap.org/>

<https://www.climate-kic.org/news/low-carbon-city-lab-integrates-new-solutions/>

홍 남 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정부 공공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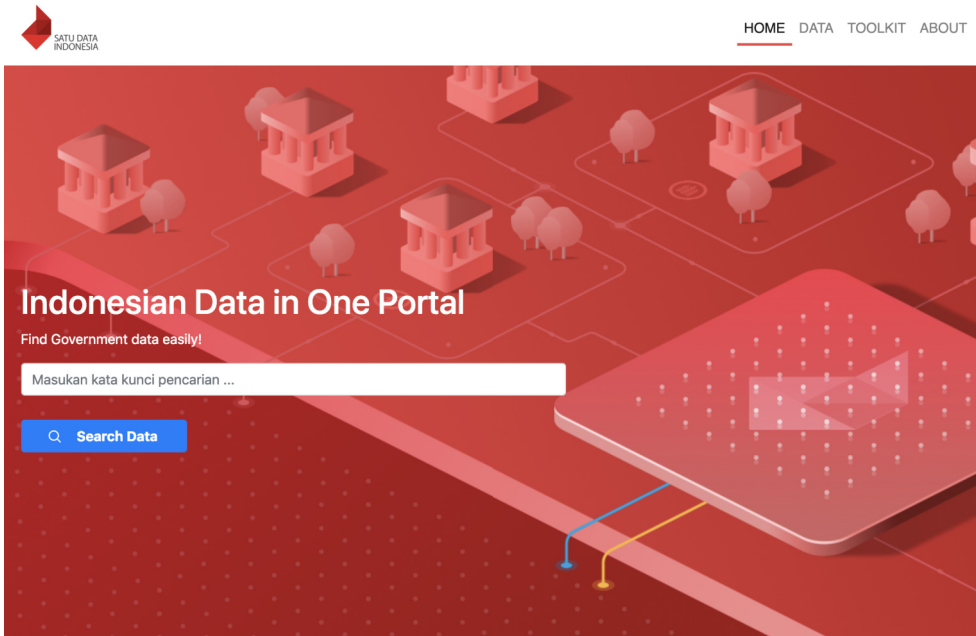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 정보·기타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 데이터’(One Data) 이니셔티브의 기초 아래 공공빅데이터의 통합성·접근성·투명성·책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정부 공공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원 데이터 인도네시아 포털’과 ‘단일지도정책 공간포털’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그 결실을 맺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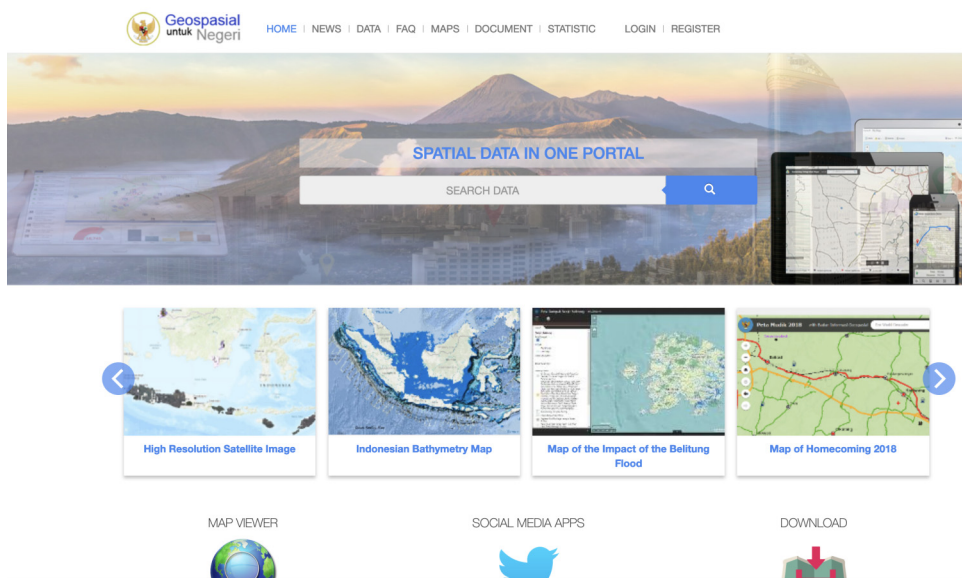
주요 내용

- 2011년부터 열린 정부를 지향하며 노력해온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다른 7개국과 함께 ‘열린 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을 맺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독려에 노력
 - 2013년 10월부터 세계은행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원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
 - 정보의 투명하고 효율적 공유·활용을 돕는 ‘원 데이터’ 이니셔티브
 - 관계부처 간, 그리고 시민과의 정보 상호이용성과 접근성·투명성·책임성 향상 목표
 - 세 가지 기본원칙으로 데이터의 단일한 ‘기준’, 단일한 ‘메타데이터’, 단일한 ‘포털’을 제시
 - 2014년 9월 ‘원 데이터 인도네시아 포털’ 웹사이트(data.go.id)를 구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총 39개 관계부처가 생산·보유한 79,168개의 데이터 세트를 공개
 - 모든 정보는 CSV, XL, XML, JSON 등 다운로드가 가능한 개방형 포맷으로 공개
 - 데이터 생산지표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대통령령 제정 중
 - 가까운 시일 안에 대통령실, 통계청, 공간정보청, 국가개발계획부가 협의하여 구체적인 데이터 생산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
 -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조성하자. 공공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여 공공정책 설계와 공공기관 관리에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자.”
-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

- 하지만 단순히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 공개된 정보의 활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음
 - 공개된 정보를 어떻게 정부와 시민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
- ‘단일 지도 정책(One Map Policy)’은 가장 대표적인 중앙정부 정보공개 플랫폼
 - 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며, 대통령령 2016년 9호를 제정해 단일 지도 정책의 근거법을 마련
 - 올바르고 정확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모든 개발 계획·프로그램의 참고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 관계부처 간의 토지이용계획이 중첩·충돌하며 발생하는 토지갈등 문제를 해결
 - 이전의 1:250,000 축척 대비 더 정확한 1:50,000 축척으로 만들어진 단일한 지도상에 모든 공간 정보를 통합적으로 표시
 - 2018년 12월, 85개 주제별 지도를 모두 통합하고 오류를 수정하여, 공간포털 웹사이트(portal.ina-sdi.or.id)에 공개
 - 공간정보청, 기상청, 재난관리청, 통계청, 농업공간계획부, 공공사업주택부 등 중앙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자료를 총망라
 - 특히 광산 개발, 플랜테이션 농업 개발과 삼림 보존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토지 갈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림 1] 원 데이터 인도네시아 포털 웹사이트



[그림 2] 단일지도정책 공간포털 웹사이트

원 데이터 인도네시아 포털 웹사이트(<https://data.go.id>)

단일 지도 정책 포털 웹사이트(<https://portal.ina-sdi.or.id>)

단일 지도 정책에 관한 대통령령 2016년 9호

<https://www.opengovindonesia.org/news/223/sosialisasi-rancangan-peraturan-presiden-tentang-satu-data-indonesia>

<https://jakartaglobe.id/context/govt-unveils-more-detailed-land-use-map-to-resolve-development-planning-disputes>

<https://www.opengovindonesia.org/practice/1/jakarta-menuju-pemerintahan-transparan>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6/03/19/needed-better-data-governance.html>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8/12/11/indonesia-launches-one-map-policy-to-resolve-land-conflicts.html>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49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2월 18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